

< 2024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Ⅲ - 교재순 >

구민희 윤준필 관세사

★ 기존의 개정사항 I 의 법 개정에 따른 관세법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2024년 관세사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개정은 제목을 빨간색으로 표시함

★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혼동의 우려가 있어 2024년 관세사1차시험과 무관한 개정과 실익이 없는 개정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 교재 27~28페이지 ★★ - 기재부장관의 직접회신사유신설 (신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의 민원인에게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교재 35페이지 ★★ - 서류보관강화 (신설)

V

장부 등의 보관

1. 의의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작성 및 보관

상기1.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화문서의 효력

상기1.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상기1.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교재 71페이지 ★ - 수출판매(정리)

<변경 전>

(1) 수출판매 - 수출판매 되어야 함.

다음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④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⑥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⑦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변경 후>

(1) 수출판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교재 141~142페이지 ★ - (정리)

<변경 전>

④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⑧ 본조사기간 추가 연장

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⑦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상기 ⑥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④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중간 생략~)

⑧ 본조사기간 추가 연장

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⑦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상기 ⑥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 교재 143페이지 ★ - (정리)

(3) 피해 누적평가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①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교재 145페이지 ★ - 덤핑 잠정조치 (정리)

⑤ 잠정조치 정산

④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 정리

● 교재 147페이지 ★ - (전면개정 - 정리)

(3)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전면개정

① 부과 원칙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③ 예외적인 부과기준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 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 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 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신규공급자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적용시기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 준용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⑦ 기준수입가격의 범위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 교재 148페이지 ★ - (전면개정 - 정리)

(2)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①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의 재심사

*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정리

● 교재 153페이지 ★ - (전면개정 - 정리)

(6)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 시행령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 정리

● 교재 159~ 페이지 ★ - (상계관세파트 전면개정 - 정리)

시행령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 교재 163페이지 ★ - (상계관세파트 전면개정 - 정리)

<변경 전>

③ 수출자정부 및 수출자의 약속의 제의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③ 수출자정부 및 수출자의 약속의 제의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교재 178페이지 ★★ - (특별긴급관세 가격기준 정리)

<변경 전>

(3) 가격기준

가격기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올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 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1 + (\text{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1 + 2 + (\text{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1 + 2 + 3 + (\text{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변경 후>

(3) 가격기준

가격기준 규정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올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text{기준가격} \times (\text{하락률} - 10\text{퍼센트포인트}) \times 30\text{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text{기준가격} \times [9\text{퍼센트} + (\text{하락률} - 40\text{퍼센트포인트}) \times 50\text{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text{기준가격} \times [19\text{퍼센트} + (\text{하락률} - 60\text{퍼센트포인트}) \times 70\text{퍼센트}]$
75퍼센트 초과	$\text{기준가격} \times [29.5\text{퍼센트} + (\text{하락률} - 75\text{퍼센트포인트}) \times 90\text{퍼센트}]$

● 교재 190페이지 ★ - 편익관세 삭제

4.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 전면 삭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 교재 197페이지 ★★ - 용도세율 적용 (신설)

3. 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신청시기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별도 신청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고시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재 204페이지 ★ - 품목분류의 범위 확대 및 수정절차 개정(정리, 신설)

1. 품목분류 수정의 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아래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2. 품목분류표 등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2)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의 변경 고시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반영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4) 품목분류 수정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

해야 한다.

(5) 품목분류 수정 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 교재 210페이지 ★ - 품목분류표의 정의 확대(정리, 신설)

<변경 전>

5. 품목분류의 재심사

(본문 생략)

- ◆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재심사 신청시 심의대상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변경 후>

5. 품목분류의 재심사

(본문 생략)

- ◆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재심사 신청시 심의대상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교재 212페이지](#) ★★ - [품목분류 변경사유 개정\(정리, 신설\)](#)

<변경 전>

1. 관세청장의 품목분류변경

(본문 생략)

상기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삭제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삭제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2.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변경시 심의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변경 후>

1. 관세청장의 품목분류변경

(본문 생략)

상기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2.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2.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변경시 심의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교재 380페이지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개정(정리, 신설)

1.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1) 의의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포탈범

법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에서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명단공개 제외사유 (생략)

(3) 통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4) 공개시 공개사항

①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5) ~ (7) 생략

(8) 공개방법

1) 공개방법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공개기간

① 원칙적인 공개기간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② 예외적인 공개기간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 교재 384페이지 ★ - 출국금지 대상 범위 용어 수정(정리)

<변경 전>

☒ 시행령 제141조의 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출국금지 대상자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변경 후>

☒ 시행령 제141조의 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출국금지 대상자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

● 교재 588페이지 ★ - 그 밖의 통관 보류대상 개정(정리, 신설)

<변경 전>

3. 통관의 보류(법 제237조)

(1) 의의

(중략)

- ⑦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변경 후>

3. 통관의 보류(법 제237조)

(1) 의의

(중략)

- ⑦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교재 627페이지★★ - 물품검사에 대한 손실보상 범위확대(정리, 신설)

<변경 전>

심 회 학 습

☒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심화학습

☒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검사 대상 물품
2. 상기1.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② 손실보상 금액 산정기준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상기 ①1.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상기① 2.에 해당하는 경우 :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상기1.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교재 688페이지 ★★ - 마약류관련 정보요구 (신설)**

(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의의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 ㉢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관세청장은 상기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4. 검찰총장 :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 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② 요구

상기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준용

상기 ① 및 ②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준용한다.

● 교재 708페이지 ★ -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 수정(정리)

<변경 전>

⑧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변경 후>

⑧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